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 7대 과제 정책 질의서



정책본부 답변서

2022.1.14.(금)

자료책임자 정책본부 기획전략실 이혁희 팀장 (010-3776-8917)

1.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고령화와 국내 투자 부진 속에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예측에 의하면 내년에는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보다는 기술혁신과 비효율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신사업은 빠른 혁신과 많은 무형자산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각국은 신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의 중요한 해결 방안이다. 한국경제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함.

○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향상,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그린산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산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함. 동시에 시장 수요에 기반한 R&D 특허, 돈 되고 사업성 있는 것은 기업이 하니깐 위험하여 실패 확률이 높은 것, 기초분야의 R&D에 국가가 집중 투자를 해야 함.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공약했음.

○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안되는 것 몇 개 빼고는 다 되는 규제 합리화, 사후 규제를 통해 기업의 창의성과 투자도 함께 이끌어내야 함.

○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형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 디지털 배움터를 만들어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 것임.

- 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을 지원하여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부족한 인적·물적·기술 역량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을 지원할 계획임
- 특히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Big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 먼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이차전지 등 5대 산업의 수퍼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산업으로 키울 로봇 등 “이머징 5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겠음
- 이것으로 많이 부족함. 더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음.

2. 저출산 문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8~2020년 사이 0.98명, 0.92명,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를 유지시키는 수준인 2명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1984년이나, 그 동안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국제순유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2021년 12월 9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준이 되는 중위 추계를 따르더라도 인구가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대 초반에 4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위 추계를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4천만 명대가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지속되면 가임 여성 수 자체가 감소하여 인구 감소를 가속하게 된다. 인구는 소비 측면에서 내수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는 가용한 노동력의 규모를 결정한다. 물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재화나 서비스 생산 등 모든 면에서 노동 절약적·대체적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이 인구 및 전체 경제 규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복의 기미가 없는 출산율의 하락은 한국경제에 잠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출생율(출산율의 중립적 용어)의 하락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 같아 들을 때마다 가슴 무겁게 생각하고 있음.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수 백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갈수록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음.
- 출생율 대책에 있어 보육, 교육,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 물론 당장 이런 지원은 당연히 중요함.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함.
-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나의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다.”는 희망이 없다고 함. 이런 상태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면 어

뎡게 낫겠는지 되물어보게 됨. 결국 사회가 우리 후대들이 더 나은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비로소 출생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회복에 답이 있음.
- 불공정과 양극화를 완하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의욕을 제고하는 공정성장과,
- 디지털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와 교육 혁신 등으로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 다시 한국 경제에 성장을 회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육아를 꿈꾸게 될 것임.
- 기회의 총량을 늘려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것. 등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죽기로 경쟁하게 하지 말고 등지를 조금 넓혀 서로 경쟁은 하되 그것이 투쟁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함. 물론 이것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음. 경제학자들이 더 좋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음.

3.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로부터 촉발되고, COVID-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정책으로 더욱 심해진 유동자금 증가 및 금리 하락이다. 두번째 요인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거래세 인상, 재건축 억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대출 규제 등 반복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시도하였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웠다. 도리어 수요억제 정책은 역진적 자산배분 효과를 유발하여 형평성마저 훼손하였다. 2021년 11월의 주택가격은 5년 전인 2016년 11월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46.0% (KB 매매가격지수, 전국 종합),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2% (KB 매매가격지수, 서울 아파트) 상승하였다.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거의 가능해졌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세대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정상화시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폭등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만일 일본의 9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 부동산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고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함. 이미 부동산은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급증한 수요도 가격상승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향후 국내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4분기 이후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음

○ 국내 주택시장은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주택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은 가격상승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함

○ 다만 2021년 12월 기준 0.11%로 양호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차기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추는 주택공급 정책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것임

○ 주택공급은 단순히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고품질, 역세권, 중산층도 선호하는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 것임.

○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가격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제도를 확대하고 도심재개발 등의 용적율 상향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또한 주택시장의 가격급락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리츠를 통하여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 주택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정책을 도입할 것임

○ 이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준비를 진행할 것임

4. 잠재성장률 제고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치’로 정의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잠재성장률 추계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추이가 꾸준히 낮아져 온 현실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한때 10%를 넘었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엔 8%대로 낮아졌고,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각각 4%대 후반과 3%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자본축적의 저하가 지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곧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

- 초고령사회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부동산으로 유동성 물리는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것이 미래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결국 문제는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것임. 성장을 제1공약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급속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우리 앞엔 외적인 위기들이 몰려오고 있음.
- 이재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겠음.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겠음
- 대전환을 통해 성장이 회복되고, 기회의 총량이 늘어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골고루 성장할 때 비로소 저출생문제, 청년들 사이의 남녀 갈등 등 한국 사회의 갈등이 완화될 것임.

- 산업 대전환 7대공약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구체적 전략으로 첫째, 주력 제조업의 혁신 둘째,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셋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래산업 Big 10 프로젝트 추진 넷째, 반도체, 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 다섯째, 소·부·장 3.0 프로젝트 여섯째,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일곱째,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잡고 있음
-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6대 디지털 기술(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리며, 창업 진흥으로 유니콘기업 100개를 달성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성장을 위해 꼭 해야 할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5. 가계부채 문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1년 사이에 6%p 올라, 증가속도도 가장 빨랐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7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상호 상승작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매우 공감함.
- 우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수요와 같은 초과 수요, 공포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는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함.
-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을 억누르면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안정적인 공급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품질은 높

이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함. 공유주택과 같은 새로운 생활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공급정책도 필요함. 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부주택 등을 통해 주거 상승의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집값 안정 그리고 공포 수요를 줄이는 정책적 수단임.

-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는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되 필요에 따라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평생, 또는 한번 무주택자가 부동산 매수시는 LTV나 DTI를 완화해서 집을 필요에 의해 살 수 있게 해야 함.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억제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함.
-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논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소위 2차 분배, 공적 이전소득이 너무 낮다는 것임. 국가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해서는 안됨. 최소한 OECD 수준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문제도 가계부채 정책을 고민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이외에도 경제학자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적극 경청하겠음.

6. 소득불평등 문제

소득불평등은 경제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구 단위로 얼마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결속력을 낮추어 정치적 사회적 위험도 야기할 수 있다. 가구간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지수와 시장소득에 조세와 보조금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수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후자는 실제 가구가 체험하는 소득불평등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도 이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소득불평등 지수 모두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크게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두 지수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5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다.

시장소득지수의 변화는 임금격차의 확대, 여성이 노동에 참여한 비율의 증가, 고령화의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소득재분배 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018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2010년 이후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저성장 기조와 함께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하여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한국 사회의 위기 중에 첫 번째는 불공정과 양극화의 위기임. 이 문제의 본질 속에는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있음. 소득불평등 해소를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과제로 제시해 준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나 공적이전소득은 적고, 가계 부채비율은 높아 국가는 여유가 있는데 국민은 빚을 지고 있는 형국임.

-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량적 재정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5%로 선진국그룹 평균인 17.3%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경제규모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첫째는 노동소득을 늘려 1차 분배를 개선해야 함. 그 다음은 정부가 재조정, 재분배 기능을 발휘해 2차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
- 1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대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함. 이를 위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등의 과감한 투자와 성장전략이 필요함.
- 2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기존 복지의 확대와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의 경제적 기본권 강화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전 사회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기본소득 도입 등 앞으로 수많은 정책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경제학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기대함. 어떤 정책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어느 진영의 정책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 국가부채 문제

국가채무/GDP 비율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이다.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064.4조원으로 GDP의 50.0%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의 상대 평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인데, 2019년에 우리나라는 42.1%이고 OECD 평균은 109.5%다. 이 수치로만 보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이라, 비교를 위하여 단순 산술평균으로 환산하면 81.9%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우리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 규모가 내부거래로 부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GDP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된다. 결국 2019년 국가부채 비율의 우리나라와 OECD 비교는 ‘42 대 110’이 아니라, ‘50 대 82’가 된다. 2025년 D1 비율 전망치는 2017년보다 22.8%p 늘어난 58.8%인데, 이를 D2로 환산하고(+4.5%p)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8%p) 71.3%에 달한다. 최근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거시경제 안정의 근간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고, 외부충격의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도 평가의 중요 요인이다. 재정지출 혜택의 1차 수혜자는 현세대이므로, 혜택·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면에서도 과도한 재정적자는 피해야 한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증과 그 부작용(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국가신용도 하락, 자본유출 등)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저출산·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재정기능의 작동’이 가능하다

-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려면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함. 다만,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방향은 공급 중심이던 과거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는 말씀 드림
- 지난 2017년 IMF는 한국과의 연례회의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즉,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

이 된다는 지적을 한 것임.

-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미래 통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GDP대비 85%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힘. (IMF Country Report No.18/40,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2018.2)
-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생·고령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이 중요함.
-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소극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 재정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 언제든지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있음.